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2026.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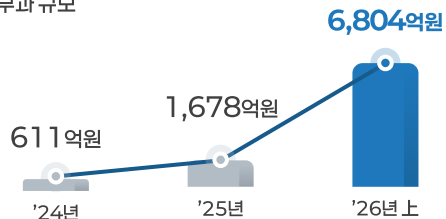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1

확실하고 엄정한 제재 확립

과징금 부과

* 부과 규모



징벌적 과징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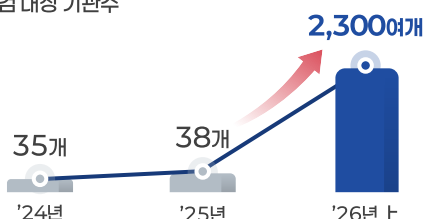
매출액의 최대 **10%** (9월 예정)

02

예방중심 보호 체계 전환 추진

공공기관 실태점검

* 점검 대상 기관수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26년 상 **82,951건** 삭제

03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처리 기간

126일
→ **30일 이내**

마이데이터 전송범위

통신·의료·에너지 3종
→ **전 분야**



침해위험 고도화

AI 해킹 등 신종 사이버 공격 확산, 침해위험 상존

- ➔ 예방적 보호체계 가속화 필요
- ➔ 국민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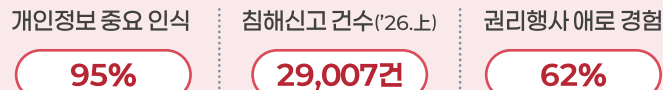


상시화된 위협

✓ 기업·기관 유출신고 증가



✓ 국민 개인정보 권리인식 향상('25 개인정보 보호·활용조사)



혁신성장 수요

전방위적 AI 전환, 데이터 활용 수요 폭증

-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필요
- ➔ 개인정보 분야 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



01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02

예방 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03

예방 **투자** 와 신속 **회복** 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04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05

국민 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위반행위에 상응한 실효적 **제재** 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제재 실효성 강화

징벌적 과징금 시행(9월) 대비 제재 체계 정비

✓ 조사 강제력 강화

이행강제금



증거보전 명령



긴급 보호조치 명령



✓ 정상화 과제

증거 은닉·폐기
행위 제재



신고·통지 지연 시
과징금 가중



신속한 조사·처분

신속한 위법 확정, 침해 확산 방지

중요사건 전담조사단(TF) 운영

소규모 사건 신속 처리절차 도입

국민생활 밀접 사건 집중 처리



플랫폼

유통

공공

불복소송 증가·대형화,
쟁점 복잡화

소송 대응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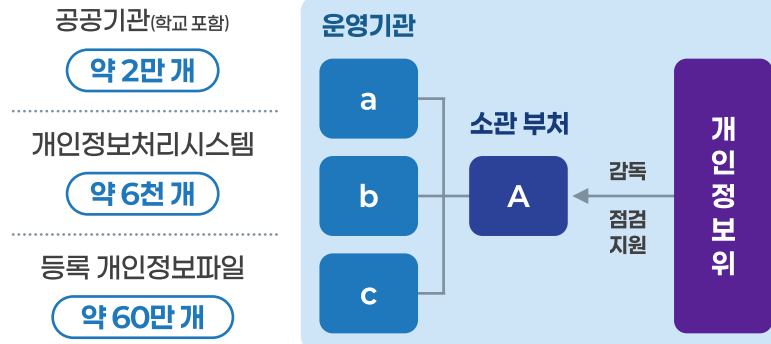
예방 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촘촘히 점검·관리하겠습니다

예방점검으로 위험요인 개선

- ✓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정기·수시 **실태점검**



- ✓ 공공부문 실태점검 **지원·감독**



평가·인증 통한 보호 실천 내재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업종별 평가,
심사에 보호
지표 포함

- ✓ 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약 400개 기관·기업)
- ✓ 전문 CPO 지정·신고제 시행
(대규모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약 600개)

공공부문 강화된 보호 조치

- ✓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 ✓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보 지원
- ✓ **처우개선**과 **책임성** 강화 병행



예방 **투자** 와 신속 **회복** 역량이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투자

보안 예산 확대

조직·인력 강화

취약점 발굴·조치



사고대응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이상징후 신속 탐지

빠른 신고·통지



신속회복

피해 확산 방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안전한 보호체계 전환

중소·영세사업자
안심 지원 패키지

최초 위반 과징금·과태료 면제



경미한 사안

보호 체계 자가점검 도구 개발



안전수준 컨설팅 지원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으로 국가와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 AI 환경을 반영하여 **위험에 비례**한 **규율체계로 전환** ”

혁신지원 제도

비조치의견서

(사례) **사망자 데이터(가명)**
의료연구 목적 **활용 지원**

사전적정성 검토

(사례) **소방청 응급환자**
이송/분류 시스템 **AI 전환 지원**

규제샌드박스

(사례) 범인 음성 분석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개발



AI 원본활용 특례

'26.5. 정무위 통과

공공·사회적 이익 위한
AI 기술 개발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 **안전장치** 마련 전제

신청 후 **30일** 이내 **신속 회신**
(유사 동일 사례는 15일)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AX를 위한 플랫폼 확대

-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데이터 활용 거점으로 확충
- ✓ 거점 이노베이션 존 간
데이터 연계(클라우드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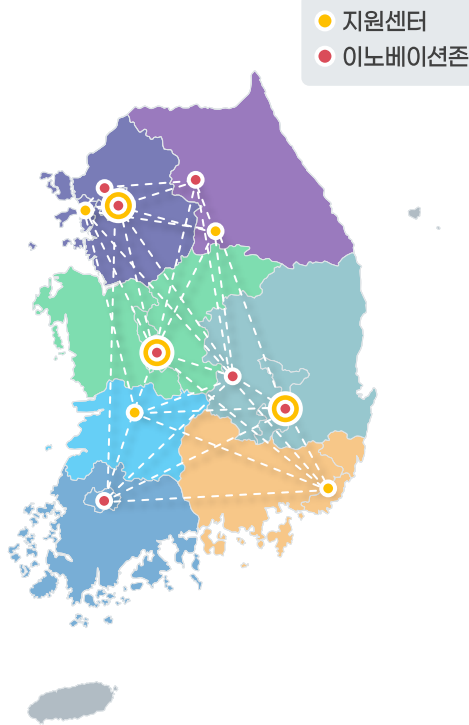
국가 역점사업 적극 지원

5극 3특
균형성장

3대
메가프로젝트
(피지컬 AI 등)

지방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력·기업 지원

- ✓ 지역 현장에 투입 가능한 청년
개인정보 보호 인력 양성 추진
- ✓ 지방 청년기업 대상
개인정보 법령·기술 컨설팅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 증진, 책임있게 살피겠습니다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 ✓ 기업이 책임을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강화



- ✓ 과징금 수입이 국민
피해회복에 쓰이도록
통합기금 마련



- ✓ 집단소송(법무부) 도입 지원

신속하고 편리한 문제 해결

- ✓ 침해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상담, 법령
문의

침해 신고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

회원
탈퇴지원

개인정보
탐지·삭제

아동·청소년
게시물 삭제

- ✓ 사자(死者) 정보 이용 및 보호
기준 마련

- 재난 상황의 사망자 정보 처리
- 사망자 디지털 계정 접근 허용 등

新위협 프라이버시 보호

- ✓ 스마트 글라스
데이터 처리 및 보호
원칙 수립



- ✓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
대응 실태점검 강화

- ✓ 개인정보 생애 주기
(수집-이용-저장-파기)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기술(PET) 개발·보급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